

충남지역 외국인 노동인력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관한 연구

윤향희

(충남연구원)

1. 서론
2. 이론적 논의
 - 2.1.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 2.2. 외국인의 체류현황
3. 정부의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 3.1.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의 체류 유형 확대
 - 3.2. 기초자치단체장 주체의 계절근로 시행
4. 충남체류 외국인의 안정적 노동인력 확보
 - 4.1. 계절제근로자의 안정적 체류 지원
 - 4.2. 기업체의 비전문취업자의 숙련기능인력 인원 확대
 - 4.3.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충남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이다. 충남은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며 노동인력 부족현상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의 노동인력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노동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외국인 노동력 확보는 외국인의 정착과 연결된다. 충남은 외국인력 확보를 위

해 계절근로제 유입과 비전문취업의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그리고 외국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비자와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 유형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충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충남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의 입국 전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비전문취업자의 숙련기능인력으로서의 허용인원 확대, 유학생의 지역취업을 위한 기업체 인턴쉽 지원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속적 체류와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계절근로자, 숙련기능인력, 외국인력 지원, 외국인 유학생, 안정적 정착

1. 서론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증대한 인구학적 변화에 직면하였다. 인구감소로 나타나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인력과 관련된 많은 사항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듯 인구변화에 따른 인구구조는 인구감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과 관련된 사항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감소는 지방소멸과 관련된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관한 사항이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부족한 사항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인구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0.81명보다 0.03% 감소하였으며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22년 충남의 인구 합계출산율은 0.9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에 따라 충남의 인구감소지역은 15개 시·군 중 9개의 시·군으로 금산, 공주,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이 이에 해당된다. 2022년 충남의 실질적 인구는 2013년에 비해 약 8만 여명이 증가하였다. 충남의 인구증가지역은 천안, 아산, 서산 등에서 증가하였고 다른 지역은 인구감소

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라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감소는 인력난과 연결되어 지역사회의 노동력 부족현상의 심화로 부각될 수 있다. 노동력부족으로 나타나는 생산성저하를 위한 노력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의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확보를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정착에 대한 사항으로 계절제근로자, 비전문취업자, 유학생의 지역정착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충남의 외국인의 유입과 이들의 체류자격,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 정착 필요성과 함께 코로나시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법무부의 외국인의 근로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 및 근로지원을 위한 한시적 근로허가의 체류자격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이 충남에서 안정적 체류와 정착을 위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논의

2.1.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저출생에 따른 노동력 감소의 영향은 광범위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국내에서 사용된 것은 2015년 마쓰다 보고서에 의해 번역된 ‘지방소멸’이라는 책으로 출간된 후이다. 인구로 구성된 도시의 자연스러운 쇠퇴의 결과가 바로 인구감소이다(최예슬, 2021). 이렇듯 인구감소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쇠퇴의 원인이 된다. 현대사회 인구 감소와 인구변화는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변화이다(김성길 외, 2017).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용어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의 정주민구를 대체하기 위한 관계인구의 등장과 함께 인

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유치에 대한 사항이 더욱 구체화되어지고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 요인은 지방소멸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사항과 지방의 젊은 인구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청년인구는 학업과 직장을 찾아 도시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되면서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 위기 등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 자연적 요인에는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와 자연재해 등의 환경적 변화가 있다. 과거의 인구변화가 이러한 요인이었다면 현재 인구 변화요인은 사회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탈산업화와 인구이동에 따른 주요 원 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감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 구감소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인구감소 를 바라볼 수 있다(정주원 외, 2022).

국내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기준 89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행정안전부(2021), 인구감소지역지정.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지역은 15개 시·군 중 9개의 시·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충남지역은 1970년 서산시(서산군)과 논산시(논산군)의 인구가 전국 시·군 중 6위와 9위의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도내에서 대전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다. 충남의 대표적인 인구감소요인으로는 수도권 확장과 규제 강화로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 아산, 내포지방인 당진, 서산, 내포신도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외 충남의 동부와 남부의 인구는 감소하는 지역 내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1989년 대전 승격과 2012년 세종 승격으로 충남의 지역 분리로 인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2. 외국인의 체류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433,31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출처: 법무부(2023), 2023년 8월호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19.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류 외국인 중 등록 외국인 1,812,929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499,270명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2만 여명 인데 비해 2020년 이후 외국인의 체류가 감소하여 2021년 약 195만 여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하늘길이 열린 2022년 5월 이후 출입국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의 증가로 체류 외국인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내 외국인 연도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법무부(2023), 2023년 8월호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22.

1)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등록 외국인은 2023년 8월 1,291,480명이며 코로나이전인 2019년 1,271,807명보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의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등록외국인의 거주는 수도권 730,930명으로 56.6%, 영남권 246,172명 19.1%, 충청권 154,891명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등록 외국인 거주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법무부(2023), 2023년 8월호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22.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도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 등록을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과 충남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지역은 외국인의 체류분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남의 외국인 거주는 79,956명이다.

충남지역의 시·군·구별 외국인의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법무부(2023), 2023년 8월호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25.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남지역의 외국인의 체류가 많은 지역은 천안, 아산, 당진, 논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지역은 천안 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고 있다. 이는 천안에 대학교의 분포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으며 천안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유학생의 비율이 높고 유학생의 체류가 많아 거주등록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정부의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3.1.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의 체류 유형 확대

정부는 코로나19시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노동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 이는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로 구조적요인이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출국과 외국인의 국내 입국제한 등은 국내 노동환경의 악화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2022년 5월 이후 구인난으로 나타나는 노동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필요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외국인 인력지원은 출국만기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연장 추가 시행, 국내 체류 동포와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 허용,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해외 신규 초청 완화와 국내에 특별체류중인 미얀마인도 계절근로 허용,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입 증가, 성실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지자체 수요 기반의 체류 지원이 이어졌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체류에 대한 사항을 확대하였으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여 외국인유학생과 비전문취

업의 체류자격변경으로 그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동반이 허용되며 배우자의 근로자 허용된다. 이에 더해 숙련기능인력의 경우 비전문취업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가족을 동반하여 한국에서 체류를 할 수 있다.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은 매년 쿼터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을 3만 5천명으로 확대 선발 계획을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대상은 비전문취업자, 선원취업, 방문취업자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근로 중인 자로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할 것에 대한 고용계약이 된 자에 해당된다. 숙련기능인력의 확대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가와 기업발전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국내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해당 기업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할 수 있다.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자는 숙련기능인력의 비자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체류하고 소득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거주와 영주자격으로 단계적 비자 취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 비자 취득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를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하였다. 이 비자의 적용대상자는 고소득자와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이다 고소득자는 학력, 경력, 분야에 관계없이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정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의 체류유형 확대가 진행되었다.

3.2. 기초자치단체장 주체의 계절근로 시행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2019년 12월 계절근로 체류자격이 신설되었다. 실질적인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의 취업허용은 2022년 1월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취업이 허용되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 외국 인근로자를 초청하고 고용할 수 있는 단기 외국인 고용프로그램으로 외

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는 도입주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다. 계절제 근로자의 고용주는 농어가와 농어업법인 조합, 농수산물 가공업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사업자로서 지자체 선정 농협이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의 계절적 구인난 해소를 위해 5개월의 구직활동기간이지만 3개월 연장하여 최대 8개월의 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농어촌 계절근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충남체류 외국인의 안정적 노동인력 확보

4.1. 계절제근로자의 안정적 체류 지원

외국인 노동력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노동력간의 대체 보완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는 유입 인력의 구성과 규모에 따라 좌우된다.

충남지역은 외국인의 체류가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은 지방의 부족한 산업인력 해소를 위해 충남지역의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산업체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약식을 시작으로 부족한 농촌인력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노동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으로 농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라오스 등의 국가와 협약을 맺어 계절제근로자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충남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제근로자는 826명이다. 2023년 1300명 대비 약 63.5%가 입국하였다. 이로 인해 시군별 계절근로자 편차를 완화하고 시군의 부담 감소와 농가부담 감소, 국내브로커 배제, 계절근로자제 공신력 향상, 계절근로자 처우개선, 농가의 계절근로자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계절제근로자의 상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이들은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한국에서의 생활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

을 것이다. 계절근로자는 한국 입국 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 없이 입국하여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입국은 국가와 지자체의 협약으로 입국한다. 이러한 협약으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교육 등을 교육을 받은 후 입국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이 진행된 후 입국하는 계절제 근로자는 초기 입국 시 한국문화에 대한 거부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연장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충남에서 생활하는 동안 안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4.2. 기업체의 비전문취업자의 숙련기능인력 인원 확대

비전문취업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비전문취업자는 숙련기능인력의 점수제 평가를 위해 노력한다. 비전문취업이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는 산업기여가치로 연간소득, 미래기여가치로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와 가족동반 체류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평가 항목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비전문취업자의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의 경우 전문인력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비전문취업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 허용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종별		허용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비전문취자수)	일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부리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출처: 하이코리아(2023). 체류자격별안내매뉴얼. 업종 업체별 허용인원.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전문취업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업종과 업체별 허용인원은 뿌리산업의 경우 5~9명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1명, 10~29명인 경우 2명, 30~49명인 경우 3명, 50~99명인 경우 4명, 100명이 넘는 경우 5명의 허용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허용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산업기여가치와 미래기여가치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하기 위한 허용인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뿌리산업의 인원을 2배로 확대하여 허용인원을 늘릴 것과 일반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10%의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을 3만 5천명으로 확대가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표 6〉과 같은 숙련기능인력으로 허용인원이 이어지는 경우 숙련기능인력의 인원확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4.3.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에서 체류형태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로 나뉜다. 어학연수를 제외한 학위과정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연구, 교환학생, 일-학습연계 유학, 방문학생의 8가지 과정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외교협정, 협정, 문화예술, 일반연수, 취재, 무역활동, 교수, 특정활동, 방문동거, 결혼이민,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허가, 방문취업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 체류자격외 활동을 받은 자는 원래의 체류목적에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할 때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하다.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 외 활동이 가능하여 국내에서 생활하는 기간 많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체류 중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준비 기간 중 상당기간 인턴십 활동을 통해 그 곳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속적인 체류를 위해 비전문취업으로 가능

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였고 지역특화형 비자와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를 신설해 고학력 외국인의 유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교육받지 못한 경우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분야에서 종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체류를 위해 졸업 후 구직 활동 중 한국어 능력 등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충남의 기업체에서 이들을 활용한 인턴십을 진행하고 관련부서에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턴십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인력의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충남지역은 15개 시·군 중 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이러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고 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외국 인력의 유입과 이들의 지역정착에 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외국인의 체류가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외국인의 유입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충남은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외국인의 체류가 많은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는 충남에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과 농축어업의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농업 인력의 부족으로 계절제 근로자의 수를 확대하여 농촌인력에 도움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충남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계절제근로자, 비전문취업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충남에서 안정적인 생활과 지속적인 정착을 위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첫째, 계절제근로자의 입국 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이 요구된다. 계절제근로자의 국내 체류는 최대 8개월이며 한국에서 계절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한다. 이를 충족하면 이들은 한국문화 및 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체의 비전문취업자의 체류자격 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숙련기능인력의 증원이다. 정부는 숙련기능인력 확대방안으로 3만 5천명 증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의 숙련기능인력의 허용인원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허용인원의 변화가 없는 경우 숙련기능인력을 확대 시행하더라도 기업체에서 인원변화가 없다면 숙련기능인력의 허용인원을 늘릴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외국인유학생의 장기정착을 위한 기업체 인턴쉽 지원이 요구된다. 충남의 천안지역은 외국인유학생의 비율이 높다. 이는 천안지역에 대학교가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충남지역에서 수학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체와의 연결을 통한 인턴쉽 활동은 지역사회에 고학력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을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충남체류 계절제근로자, 비전문취업자의 숙련기능인력으로서의 체류자격 변경 허용인원 확대,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쉽 지원으로 충남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안정적인 체류지원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충남의 체류 외국인의 확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인원충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

| Abstract

A Study on Support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Foreign Workers in the Chungcheongnam-do Region

Yun, Hyang-hee
(ChungNam Institute)

This study is aimed at supporting the stable settle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Chungcheongnam-do.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9 out of 15 cities and counties are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and are experiencing a labor shortage. Securing foreign labor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respond to the decrease in labor force in areas with declining populations, and securing foreign labor is linked to the settlement of foreigners. In order to secure foreign workers, South Chungcheong Province is in the process of changing its status of residence to skilled workers in non-professional employment, through the seasonal work system, and to regional-specific visas and negative professional visa types to help foreign students settle in the region. To help them settle down stably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we propose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for seasonal workers before their entry into the country, expansion of the number of non-professional workers allowed to become skilled workers, and support for corporate internships for local employ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Based on this, we hope that foreigners staying in Chungcheongnam-do will have a continuous stay and stable settlement.

[Key words] Seasonal workers, Skilled workers, Foreign labor support, Foreign students, stable settlement

투고일 2023. 10. 25 / 심사일 2023. 11. 14 / 게재확정일 2023. 11. 23